데스크 시각

좌초한 광주 체육계의 민주주의

윤영기
특집·체육부 부국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 9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기막힌 반전이다. 지난해 7월 회장 선거 관련 소송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올 초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처지라 그의 복귀는 남다른 대목이 있다.

민사소송은 최근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형사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구속,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발생한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쳤다. 대법에서 원심대로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체육회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회장직이 박탈된다.

소송 취하로 불명예 복귀한 회장

위태로운 회장직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그만큼 착잡할 수밖에 없다. 애초 그가 소추된 상황을 알고 뽑았기 때문에 체육계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미뤄 둘 일은 아니다. 광주 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광주는 또다시 오물을 뒤집어써야 한다.

체육회장 낙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던 선거 난맥의 정곡을 찔렀다.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고 체육회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이지만 선거의 핵심인 선거인 수 배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는 낙선자들의 개인 소송에서 체육계의 공적 현안으로 치환됐다. 이 회장을 비롯해 출마자 세 명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끝을 봐야 할 공적 사안이 낙선자들의 소취하로 없던 일이 됐고 이 회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상식 밖이다. 과연 광주시장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용인됐을까. 소취하라는 변칙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을까. 체육회는 왜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인파이팅을 하지 않고 아웃복싱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광주체육회를 방기하는 집단적 묵인과 방관 때문이다. 광주체육회 직원들은 회장 복귀를 앞두고 관련 단체에 축하 난과 화분을 보내라고 종용해 회장실 복도를 꽃길로 만들었다. 이쯤되면 후안무치의 끝판이다. 이 회장이 직접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꽃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광주 체육계는 민주주의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묵살했다. 낙선자들을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로 낙인찍었다. 부실이 농후한 선거 룰을 설계한 체육회를 문제 삼지 않고 엉뚱하게도 비난의 총구를 낙선자들에게 돌린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패배했으니 깨끗이 승복해야 함에도 분란을 일으킨다고 몰아세웠다. 체육회도 부당한 프로파간다의 발신지 가운데 하나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밖에서 보면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겠다는 게 왜 분열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체육계에서는 통한다.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했음에도 공세는 지속됐다.

한편에서는 낙선자들의 지인들까지 나서 집요하게 소취하를 종용하고 권고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해 나섰는지 캐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세상사가 그렇듯 불온한 세력은 매사에 집요하고 근면하다. 상식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번번이 분노하고 꺾이는 이유다. 고립무원에 빠진 이들이 선택하는 최후는 포기다. 결국 '소송을 취하당한' 낙선자들의 용단은 과녁을 한참 빗나가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묻혀 버렸다. 애석하게도 외부의 개혁 요구가 좌초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침묵으로 외면한 개혁의 목소리

곡절 끝에 복귀한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와 관련해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과도 있지만 공도 있는 체육회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의 진정을 의심하지 않으나 '공도 있다'는 말에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느껴진다. 체육회가 만든 선거 룰에 의해 당선된 회장으로서 그 룰을 만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설사 그가 개혁에 나서더라도 남은 임기는 7개월 뿐이고 정년이 보장된 체육회 사람들과 싸움이다. 승패가 훤히 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보내더라도 체육계는 선거 소송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체육계를 지탱해 온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의 전통 때문이다.

한 마디 더 보태자. 광주시체육회장을 뽑게 되는 내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치러진다. 본질적으로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인 수 배정 등 핵심 사안은 차기 선거에서도 여전히 광주체육회의 몫이다. 벌써부터 차기 선거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 행정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배제한 탓이다. 부디 차기 회장 선거가 논란 없이 치러지길 바랄 뿐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보수든 진보든 상대의 씨를 말리겠다는 발상은 '복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 중 하나인 우분투(UBUNTU)는 반투족의 인사말이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분투의 핵심이다.

27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넬슨 만델라가 복수에 방점을 뒀다면 남아공은 흑백 간의 갈등으로 피의 보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정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독점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모두 새겨야 할 대목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의 대물림과 학벌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현대판 신분 사회다. 이를 그린 드라마가 바로 2019년에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지배 엘리트의 부도덕하고 끝없는 욕망을 보면서 다다를 수 없는 좌절과 충격,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신분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부익부 빈익빈이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한국은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부동산에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 이강국 교수는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6.4%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기업 중에 전설로 남은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주인은 사회'라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1969년에 회사의 경영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줌으로써 가족 세습 경영의 폐단을 최초로 끊었다. 전 근대 사회인 17세기에도 부의 본질을 깨달은 경주의 최부자 같은 이들이 있었다.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던 이들 말이다.

U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16'에 따르면 행복지수 1위 국가는 덴마크다. 그들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평등 사회라는 점이다. 덴마크는 빈부격차는 물론 직업의 귀천도 느낄 수 없는 '평등과 신뢰'가 깔린 사회다. 필자가 덴마크의 한 교장실을 방문 했을 때 그들은 '교장 선생님'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미스터 토마스(Mr. Thomas)와 같이 교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모든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덴마크에서는 신분상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다. 국회의원들도 손님이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접수대에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음료수를 대접한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다. 택시 기사들도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의사, 변호사 친구들과도 주눅 들지 않고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덴마크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한국은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배웠으나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내가 먼저'라는 강박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부족하다. 이처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갑질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자신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다"라는 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듯하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기 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더 나은 시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2%가 법 제정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사에서도 국민 83%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간호사 처우가 개선돼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준엄한 시대적 요구를 표명한 거라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간호법안이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킨 결과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앞으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 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 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법안 심사 소위 통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행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연달아 내놓자 최근에는 기다렸다는 듯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각 분야에 소속된 130여 개의 전문가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함께 하고 있다. 특히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들이 범보건의료계가 모두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범시킨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동참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 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해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OECD 기준의 네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간호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간호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간호 인력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 이제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간호법은 결코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다. 치료 중심의 현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 도래할 초고령사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을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을 했다. 그리고 여야 3당의 모든 대선 후보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간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간호사들이 환자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社說

'국민이 주인인 나라' 천명한 윤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에 기반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포함해 당면한 국내외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다짐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의지 천명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과 협치가 관건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바가지 요금 횡행 송정역 주차장 확충 급하다

광주 송정역 인근 사설 주차장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송정역에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정역은 KTX와 SRT 등 호남고속철도의 복합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1만 7000여 명, 주말에는 2만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717면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송정역 인근 사설 주차장들이 코레일 주차장 요금의 두세 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받으며 얌체 영업을 하고 있다.

코레일 주차장의 경우 하루 주차 요금이 7000원이고 철도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1만 원인데 반해 사설 주차장들은 하루 요금으로 1만 6000원에서 2만 원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설 주차장들이 선결제로 주차 요금을 받는 것도 문제다. 1박 2일로 서울을 다녀올 경우 이틀치 주차 요금을 먼저 결제하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48시간을 주차하는 이용객은 거의 없다. 더구나 '송정역 주차장' '송정역 유료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간판을 달아 코레일 주차장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미끼 영업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하지만 광주시나 코레일 측은 이를 단속할 법규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안은 코레일 주차장을 확충하는 일이다. 코레일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6월부터 1570면짜리 주차 타워를 짓고 있다. 한데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준공이 동절기 공사 중단과 원자재난으로 두 달 가량 늦춰졌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 주려면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송정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가 광주의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無等鼓

인사청문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어제 열렸지만, 윤 정부와 함께 할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18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제도다.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로 낙마한 인사들은 부지기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내정만으로는 웃을 수 없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첫 내각 구성 국무위원 내정자들도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부모 찬스' 등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의혹 메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여기에 '법인 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도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으로,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다. 하지만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 미달하는 상당수 인사를 고위 공직자로 내정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그들만의 기득권'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접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내각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코드는 '소통'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면 자신이 강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국민과의 '소통'도 스스로 단절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